

【첨부#3. 2009년도 국별 사업의 시사점】

인도네시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권오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 첫째, 개도국 단계에서 경쟁법·정책을 도입해 지난 30년 동안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한국의 경험은 한국보다 약 20년 늦게 경쟁법을 제정한 인도네시아의 경쟁정책 발전에 매우 유용한 지침과 교훈을 제공할 것임.
 -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경제적 효율성을 지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쟁정책, ②경제이론에 의해 인도되고 경제분석에 기초한 경쟁법 원칙의 발전 및 집행, ③시장경쟁 강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및 공적 경쟁제한요소 제거, ④적용제외 영역의 최소화, ⑤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활성화 수단(리니언시 제도) 도입, ⑥수직적 제한, 가격차별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합리원칙으로의 전환, ⑦사건선별 등 법집행 방침, 위법성판단방법과 기준 등을 밝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증대
- 둘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 금융감독시스템 재구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통합에 앞서 개별 감독기구 사이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의 경험에 바탕한 통합감독기구와 재무부, 중앙은행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명확한 합의와 규정이 감독기구 개혁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함.
- 셋째,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 방안과 관련해,
 - 인도네시아 유동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층의 확대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활성화가 필요하며, 증권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문성 제고와 자산유동화증권 및 채권에 대한 투자자층 확대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에 근거한 다양한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 넷째, 인도네시아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선택적인 성과정보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에 근거한 모니터링 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성과정보 수집과 생산을 위한 리뷰과정을 도입해야 함.

베트남의 2011~2020 경제사회발전 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현재 베트남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의 비전은 '산업화된 중진국가'를 이룩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1960~70년대에 추구한 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바, 수출주도의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한국의 발전경험은 베트남 경제발전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
- 첫째, 그간의 베트남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잠재성장능력 및 경제의 구조변화를 추정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인 위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 구성, 정치적 안정, 시장개혁의 지속 등도 향후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반면 거시 및 금융상황의 불안 가능성, 인적자본과 인프라의 취약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취약점과 도전으로 작용할 것임.
 - 예상되는 인구 변화, 저축 추이, 경제의 효율향상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전망 등을 토대로 할 때 202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에서 7.5%로 예상되며, 7.5%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향상을(중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이룩한 정도로) 가속화해야 함.
-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1997년과 같은 경제위기를 회피함으로써 성장이 크게 뒷걸음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진전될 금융·자본자유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특히 금융시장에의 접근도가 낮은 서민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활성화 역시 과제임.

- 셋째, 2020년까지 ‘산업화된 중진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술예측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 할 역량 있는 과학자, 엔지니어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체계를 수립하고 혁신 주체들이 인접한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과학기술 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합리적인 토지 이용 촉진을 위해서 토지 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지방에 더 이양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계획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며, 나아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도시정보시스템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도시지표 및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한편, 지적측량과 토지등기를 포함한 토지관리정보체계(LMIS)의 구축과 관련법의 제정 또한 검토해야 할 것.
- 다섯째, 베트남 국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술인력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며, 향후 경제활력 회복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 중소기업 육성에 더 큰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장

-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을 통해 1)제도적인 문제, 2) 발전부문에서의 설비용량 부족과 비싼 전원구성(fuel mix), 3) 배전부문에서의 기술적, 비기술적 손실문제, 4) 전력시장의 분절화 문제 등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하에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전력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행해야 할 것임.
 - 둘째, 전력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수요예측결과는 당장 부족분 1,200MW포함 2012년까지 1,530MW, 2016년까지는 총 2,800MW의 신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설비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투자, 보수해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발전원가 절감을 위해 연료구성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셋째, 배전계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선을 통한 기술적 손실 방지는 물론, 전력설비와 전기사용자의 접점지역에 위치하는 배전의 특성을 고려해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룩될 비기술적 손실 방지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련법과 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건설, 유지, 보수 모두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전력설비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 적절한 타이밍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데, 도미니카공화국의 14개 발전회사, 3개 배전회사 사업구도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는 한국전력이 정부의 경제개발 및 에너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발전, 송·배전 수용가 관리까지 일관되게 전력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례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현재 전력 시장 사업구도의 전환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할 것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 설립 정책자문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 경제협력팀장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 업종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에서는,
 -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다각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나보이 FIEZ에 전기·전자 기기,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운송용 기기, 일반 기계류, 금속 가공품 등 업종의 유치를 제안함.
 - 또한 최근 경제발전 정도나 국제 경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우즈베키스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추세가 진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운영과는 별도로 제도적·법적 정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개방 및 자유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투자유치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는,
 - 다양한 산업에 속한 업체들을 유치하기보다 심층 산업분석 후 특정산업을 유치하고, 동 산업과 관련 있는 계열화된 제품(기술) 생산업체를 유치해 향후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함.
 - 나보이 FIEZ 입주업체의 수출, 내수기업 구성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실제 특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원화 송금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함.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 나보이 경제특구의 운영체제는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부총리로 구성된 FIEZ 위원회와 위원회 결의사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FIEZ 기획단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기획단이 나보이 특구의 발전방향, 투자유치전략,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선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FIEZ 기획단 산하에 나보이 특구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청을 설립하고, 경제개발위원회, 국제경제정책위원회, 사회·문화관리위원회, 기술 및 교육위원회 등 7개의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안함.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의 법적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 입주기업이 투자계약 초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제혜택 기간 적용에서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할 것과 외국인 기술자 유치를 위한 장기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 대부분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 내각령 등 하위법의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예컨대 기존 FEZ Law)에 반영할 것과 아울러 현재 WTO 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이 가입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특구정책에 대해 제시될 지적사항에 미리 준비할 필요성, 향후 FTA 체결시 기존 FTA와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도 무관세접근이 가능토록 노력할 것을 제안함.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강문수 KDI 명예연구위원

-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국내외 자금조달 확대방안으로는,
 - ①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 대한 상업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구의 설립 ②국제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수립 ③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펀드 (Microfinance Investment Fund, MFIF)의 설립 ④마이크로파이낸스 관련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을 제안함.
- 캄보디아 농촌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 ①포괄적인 농촌중소기업 정책안의 수립 및 담당기구 설립 ②유망 농촌중소기업 등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도입 ③농업협동조합 네트워크 설립 ④농촌 중소기업에 대한 신디케이트 대출을 도입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 또는 현존기관의 활용을 제안함.
- 캄보디아 PPP사업을 위한 법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 ①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확고한 PPP체제의 확립 ②민간위탁(Concessions)에 관한 캄보디아 법을 감안하여 입찰, 계약, 위험분담 및 갈등해결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③PPP 전담기관의 설립을 제안함.
- 캄보디아 PPP사업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으로는,
 - ①PPP 사업을 위한 자원조달에 있어서 인프라채권 발행 및 여타 방안 검토 ②합리적인 자본예산시스템의 도입 ③적절한 조세감면 혜택과 최소수입보증(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제공 ④인프라투자를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함.
-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한국 정부 및 ADB와 공동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기금(MFIF) 설립, 정미소 (rice mill) 추가 건설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캄보디아 정부는 PPP 전담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조항 작성에 이미 착수, 상기 여러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산업혁신개발계획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장

- 본 프로젝트는 크게 ①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경제계획, ② 산업별 분석과 육성방안으로 구성됨.
 - 전반부에서는 호주, 캐나다와 같이 영토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적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현황 및 성장경험을 비교 분석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재설정함.
 - 후반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부문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연구인력 및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자재, 농기계, 상용차 및 농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함.
- 이와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건축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 ①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②기술 연구소 설립, ③기술 수준 강화, ④정부 보조금으로 각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업자협회 설립 및 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 ①제도적 기반 수립, ②해외직접투자 유도, ③농민에 대한 자금 지원, ④지원산업 강화, ⑤인력 양성 계획에 힘쓸 것을 권고함.
- 카자흐스탄의 상용차 발전을 위해서는,
 - ①시장 수요에 따라 자동차 우선순위(경트럭, 중대형트럭, 중형버스) 선택, ②2015년까지 국산화 30% 목표에 따라 생산량 지정, ③체계적 전략에 따른 생산 능력 증강 계획, ④자동차 부품산업 개발, ⑤마케팅 전략 수립(국내 수요 창출, CIS 지역으로 수출 장려, 동유럽, 중동과 중국으로 수출 장려) 등을 강조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을 위한 FDI 정책 강화,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 정책, 국내 수요 및 수출 진흥 정책,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극대화,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 등을 언급

□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 ①농산물 생산성 증가를 위한 전략적 접근, ②농업 마케팅의 개선, ③농촌 사회의 정신 개조가 필요함을 제안함.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수급 상황 및 에너지정책의 분석결과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에너지가격의 현실화, 에너지부문의 투자재원 조성, 난방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석탄의 생산과 이용분야에 대한 업그레이드, 풍력 연구개발 및 보급(R,D&D)의 활성화, 바이오연료 산업 및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함.
 -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가격 누진제의 도입을 권고함.
 - 에너지부문 투자수요 대비 확보 재원의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2030 에너지전략’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충분한 자금 조성을 위해 한국의 석유수입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같은 기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난방방식인 열전용 보일러 지역난방을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우크라이나는 세계 7위의 석탄 매장량 보유국이나 투자부족과 더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석탄 순수입국에 머물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석탄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노후 설비 교체, 새로운 기술 도입, 합리적인 경영 등이 요구됨.
 -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마련에 있어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관련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후설비교체, 관련기술 개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 등에 대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풍력개발 분야의 후발주자이며 북유럽의 우수한 풍력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풍속대에 위치한 관계로 풍력보급에 있어서 정책적 유도가 매우 중요함.

○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풍력산업을 차세대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우크라이나는 넓은 국토면적과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동유럽 국가 중에서 바이오매스 생산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최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도입기에 있는 바이오연료 산업 및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대국민 홍보 및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 에너지작물 생산, 바이오연료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바이오연료 품질, R&D)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